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국민 참여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발리 주요 20개국(G20) 모범사례로 소개(22.11.30)
- ② 국민권익위, [UN 세계 반부패의 날] 반부패 주간(12.7.~9.)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행사 열어(22.12.7)
- ③ 전현희 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대한변호사 협회 특강(22.12.16)
- ④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22.12.21)
- ⑤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22.11.3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국민 참여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발리 주요 20개국(G20) 모범사례로 소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등  
G20 정상회의 부속서에 수록

(22. 11. 3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국민 참여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발리 G20 정상선언문 부속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국민 참여 및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Public Participa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이 지난 16일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이 사례집은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반부패 국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모범사례집에는 부패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해 온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다.

국민 참여 우수사례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국민대상 설문조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패·공익침해 신고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반부패 교육 우수사례로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소개됐고, ▲유아를 위한 청렴 인형극 ▲윤리와 도덕 가치가 포함된 초중등 교육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제작한 청렴 보드게임 ▲청렴 가치가 내재된 웹드라마 등 미래세대 대상 프로그램도 설명됐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국민 참여 제도 및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렴가치와 문화가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UN 세계 반부패의 날] 반부패 주간(12.7.~9.)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행사 열어

청렴·공정 북콘서트, 청렴뮤지컬, 청렴송 챌린지 등 개최

(22. 12. 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다양한 반부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90여 개국이 2003년 12월 9일 '유엔 반부패 협약'에 서명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세계 반부패의 날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설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부패 주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등을 통해 온라인 위주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7일부터 청렴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청렴·공정 북콘서트'를 '권익비전'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북콘서트는 총 2부작으로 1부에서는 공정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2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눈다.

8일 오후에는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총 1,907편의 출품작 중 50편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98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9일 오후에는 제4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원년을 기념하는 <청렴 Live: 이해충돌방지법 특집편>을 개최한다.

'청렴 Live'는 반부패·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Live에서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과 이해충돌을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뮤지컬 형태로 표현한 '처음처럼'을 공연한다. 해당 영상은 '권익비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인 '가장 보통의 청렴 이야기'를 함께 불러보는 '청렴송 SNS 챌린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반부패 주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간 : 2022. 12. 7. (수) ~ 9. (금), 3일간
- 방식 :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현장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송출·홍보 병행
- 온라인 채널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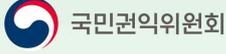
날짜	시간	세부 행사명	비고
12.8.(목)	14:00 ~ 16:00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발표회	「권익비전」 생중계
12.9.(금)	14:00 ~ 15:00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권익비전」 생중계
	15:00 ~ 16:00	청렴 Live : 이해충돌방지법 특집	
12.7(수)	-	청렴·공정 북콘서트	사전제작 영상 「권익비전」 송출
11.21.(월) ~ 12.9.(금)	-	청렴송 SNS 챌린지	온라인 참여행사

○ “2022 반부패주간” 홍보 포스터



○ “청림송 챌린지” 홍보 포스터

우리모두 청림한 대한민국  
**2022 반부패주간**



# 청림송 SNS챌린지

‘가장 보통의 청림이야기’ 를 함께 불러주세요!

- 운영기간 2022. 11. 21.(월) ~ 12. 9.(금) 24:00
- 발표일시 2022. 12. 14.(수) 개별통지
- 운영대상 누구나(개인 단위, 기관 단위 모두 가능)
- 운영노래 가장 보통의 청림이야기  
(하유나 작, 국민권익위원회 2021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 운영내용
  1. 유튜브 또는 음원사이트에서 노래 검색하여 듣고,
  2. 마음에 드는 구간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15초이상의 영상으로 제작 (음원 틀어놓고 같이 불러도 좋아요)
  3.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  
(해시태그 필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2반부패주간 #청림송챌린지)
  4. 영상 원본과 SNS 업로드 주소, 경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메일주소)를  
사무국 메일로 보내주세요. (kimedia8800@naver.com)  
(경품 응모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파기)
  5. 경품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쿠폰 발송 (10팀)



BBQ 황금올리브치킨 +  
오리지날양념치킨 + 콜라1.25L



뚜레쥬르 고구마케이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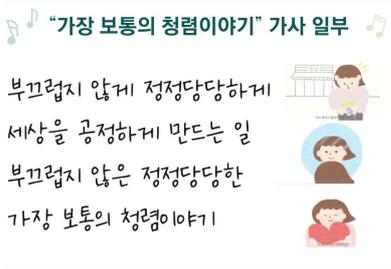
도미노피자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L  
+ 치즈볼로네즈스파게티 + 콜라1.25L



컬처랜드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

※ 유의사항

- 참여작품은 주최측에서 편집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작품은 반부패주간 기념식에서 상영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작품은 편집 가공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에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통의 청림이야기” 가사 일부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  
부끄럽지 않은 정정당당한  
가장 보통의 청림이야기



## 전현희 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대한변호사협회 특강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 위한  
청렴윤리경영 중요성 강조

(22. 12. 1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경(E)·사회(S)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K-CP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에 따른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2. 12. 21. 국민권익위)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지 내 출장(12km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영역의 조례를 분석·검토해 지자체의 부패요인을 발굴했다.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관리자인 5급 공무원 이상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선정하고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위탁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통보할 계획이다.(붙임 1 참고)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자치법규는 약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올해는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라고 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1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 □ 평가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율적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 예방
- (평가기간) '22. 7. ~ 11. (약 4개월)
- (평가대상)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46,917개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전체(243개)	147,999	102,030	27,438	14,953	3,578
<b>79개 지자체</b>	<b>46,917</b>	<b>32,448</b>	<b>8,879</b>	<b>4,656</b>	<b>934</b>
3개 지자체	1,541	1,063	295	162	21

- (평가체계) 부패영향평가과 내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개선팀을 구성(실무인력 4명)해 자치법규 평가업무 전담 추진
- (평가방법) 자치법규 전수 평가 및 유사 자치법규 간 교차 분석
  - 현장방문(7개 지자체) 통해 개선사례 수집·검토 및 지역의 주요 부패·규제 이슈 모니터링

### □ 평가결과

- (부패개선과제) 지방의회, 인사·복무, 보조금, 민간위탁·투자, 축제·행사 안전 등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기관당 25건)의 개선사항 도출
- (규제혁신과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과 관련된 10개 규제혁신과제, 13개 세부개선사항 발굴

## 2 주요 개선과제

### 1 지방 토착비리 및 관행적 부패 예방

####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17개 과제)

- (국외출장) 공무국외출장 변경 시 심사 생략요건 개선 및 출장 시기, 경비의 적정성 등 실효성 담보 가능한 심사기준 마련
- (국내여비) 근무지내(12km 미만) 출장비 지급 근거 삭제하고, 허위 출장 및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5배 가산징수)
-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 제한(4만원초과→3만원이하), 업추비 사적 용도 사용금지 등 집행 제한기준 마련 및 부당사용 환수·징계
- (겸직신고) 겸직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 (징계)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외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비위행위 추가

#### □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엄정 관리 (13개 과제)

- (채용) 공무원 채용공고 기간 확대 및 공고절차 생략을 금지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은 필수로 하되 필기·실기의 경우 선택적 적용
- (출장) 출장비 사후정산,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상향(2배→5배), 출장 여비 정액이 아닌 실비지급 등 허위출장 관행 근절
- (포상휴가) 모호한 포상휴가 판단기준(탁월한 성과와 공로) 구체화해 조례에 명시하고, 포상휴가 사용일수 제한(3~5일)
- (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신설 및 지급 제외대상 확대(4급→5급이상)하고, 민간 위촉위원 참여 보장 등 위원회 통한 공적 심사 결정(담당과장이 심사해 군수 결정 ×)

□ **보조금 및 금고 협력사업비 등 재정누수 차단** (18개 과제)

- (전기차)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결정의 모호성 제거 및 편취 환수·제재와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의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 (금고) 금고지정 시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지정 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 협력사업비 세입조치하고 총액 공개(집행내역은 재정공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과 당연직 위원 공석 시 대리출석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자로 지정

□ **민간위탁 및 기업 투자** (20개 과제)

- (공영주차장)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 선정,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주차면수, 공시지가, 운영일수, 실제 주차비율 등) 명시  
- 수탁자 관리감독 근거·방법 마련 및 주차요금 감면사유 명확화
-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에 반하는 비공개 예외사유 삭제 하고, 시설·장비·비용의 위탁목적대로 사용 의무화(변경사용 승인 등)  
- 연 1회이상 감사 실시 및 결과 위법·부당사항 시정·인사조치 병행
- (기업유치·지원)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상한금액 등의 위임 근거 마련,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중단의 단체장 재량 배제

□ **지역 축제·행사 안전 및 사업 공정성·책임성 제고** (17개 과제)

- (축제·행사) 축제·행사 안전관리 조치의무, 안전전문가 참여, 사후 평가 도입 및 안전분야 항목 마련해 점검·환류, 지역주민 참여 등
- (사업자 선정) 특정단체(산림조합)에 한정된 수목 식재·관리사업 위탁대상 확대(조경사업자, 산림사업법인 등)해 진입장벽 철폐
- (용역실명제) 용역과제 담당공무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선정, 연구결과 등 책임소재 명확화, 결과 등 주민 공개

## 2 주민 권리제한 등 부패성 규제 제거

### □ 행정편의 규제 완화로 주민편의 향상

#### ① 수수료 징수·반환

####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현행	개선
(제한징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징수 (불반환) 기납부 수수료 신청변경·취소해도 불반환 (일부감면) 감면대상이 수급자 등 일부로 한정 (임산부 주차요금 부담) 사회적 배려 필요한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거나 감면혜택 미부여	(방법다양화) 현금·카드 외 전자수입증지,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근거마련) 신청변경·취소 외 지자체 귀책, 과오납 경우에도 반환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감면확대) 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대상 확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 ③ 농기계 임대료 의무반환

#### ④ 전통시장 관리자 민간 지정

현행	개선
(불반환) 소극적 불반환 규정 방식으로 당연 반환 사유 발생해도 불반환 초래 (공무원) 화재안전관리, 유통질서 확립 등 전통시장 관리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	(의무반환) 임대인 관점에서 천재지변 등 명백·타당한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반환 (민간) 상인회, 공공법인 등 시장 현장을 중심으로 지정해 자율성·전문성 제고

### □ 진입장벽 등을 제거해 기회 공정

#### ⑤ 도시숲 조성·관리 위탁 사업자 참여 확대

현행	개선
(특정단체위탁) 도시숲 사업자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 특정단체로 한정	(참여확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지역전문업체 참여 가능토록 추가

⑥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자 신청자격 완화

연행	개선
(자격제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임·축·수산물을 생산한 자로 신청 제한	(자격확대) <b>지역거주 제한 삭제</b> , 농·임·축·수산물 생산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자격 확대

⑦ 환경미화원 응시자격 제한완화 ⑧ 공무원 등 채용규제 제거

연행	개선
(연령상한) 환경미화원 응시연령(18~55세)을 두어 연령 제한	(연령상한 철폐) 응시가능 <b>상한연령 폐지</b> 해 응시자격 확대
(학력제출) 최종학력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해 학력 제한	(학력서류 미제출) <b>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을 없애고</b> 블라인드 채용 확대
(비공개) 근로조건 등의 공고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	(공개채용) 공무원 등의 채용을 <b>공개채용</b> 원칙으로 개선
(기간단축) 채용 공고기간을 2~3일로 지나치게 단축	(기간확대) 공고방법·범위 등 구체화하여 <b>최소 7일 이상 공고</b>

□ 법적 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의무 제한 철폐

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시 재등록 제한 완화

연행	개선
(기간초과)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법정 상한기간을 초과(2년, 5년)해 운영	(기간준수) 가맹점 재등록 <b>제한 규정 삭제</b> 또는 <b>법정기간(6개월~1년 이내) 준용</b>

⑩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연행	개선
(화물자동차 면제)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특수자동차 면제) 총중량 <b>3.5톤 이하의 소형 특수자동차</b> (렉카, 사다리차, 활어운송차)를 소유 영세 운송사업자도 면제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시행 첫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점검 지속 실시...사회복지 분야 환수·제재부가금 가장 많아

(22. 11. 30.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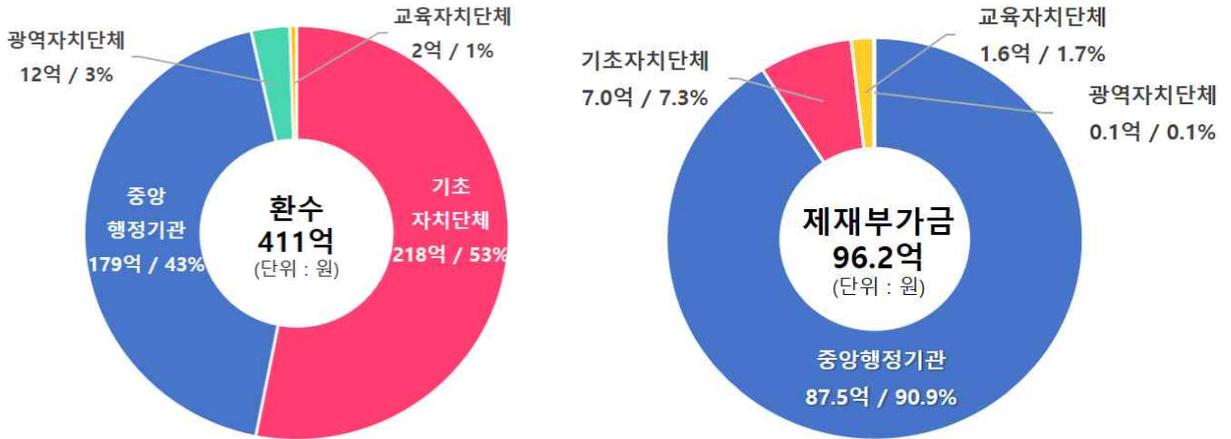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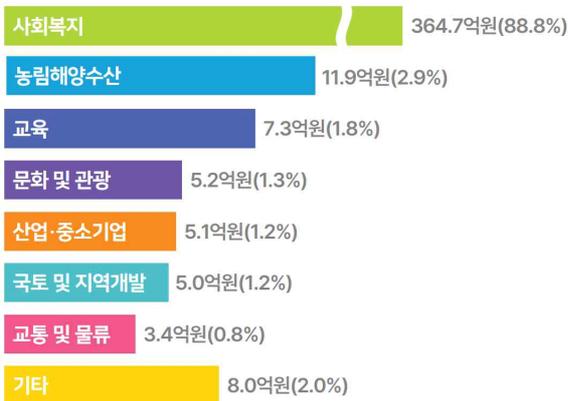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 원(91%)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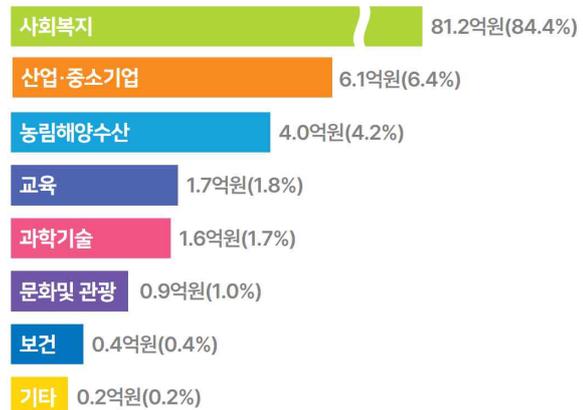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2022년 상반기 환수처분>



<2022년 상반기 제재부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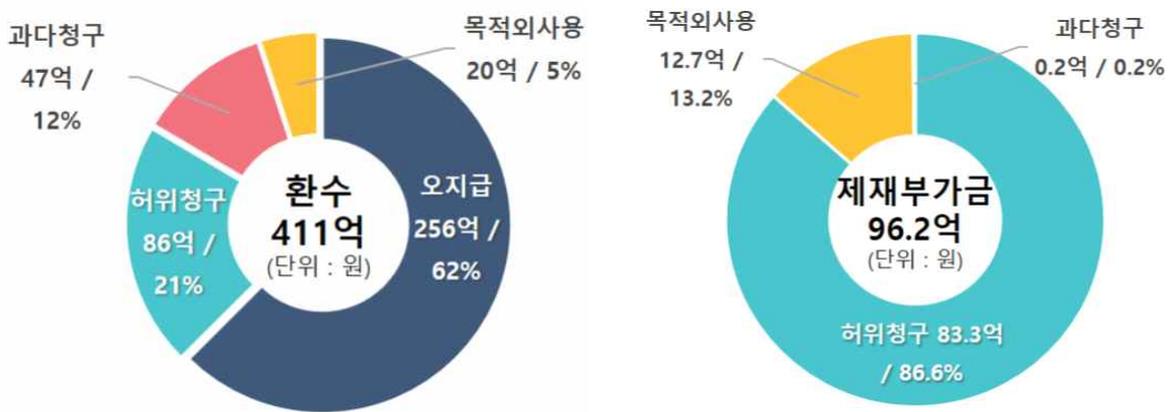


\* 상위 7개 분야 기준으로 비교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3억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7억 원(13.2%), '과다청구' 0.2억 원(0.2%) 순으로 많았다.

\* 제재부가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외사용'의 경우 부과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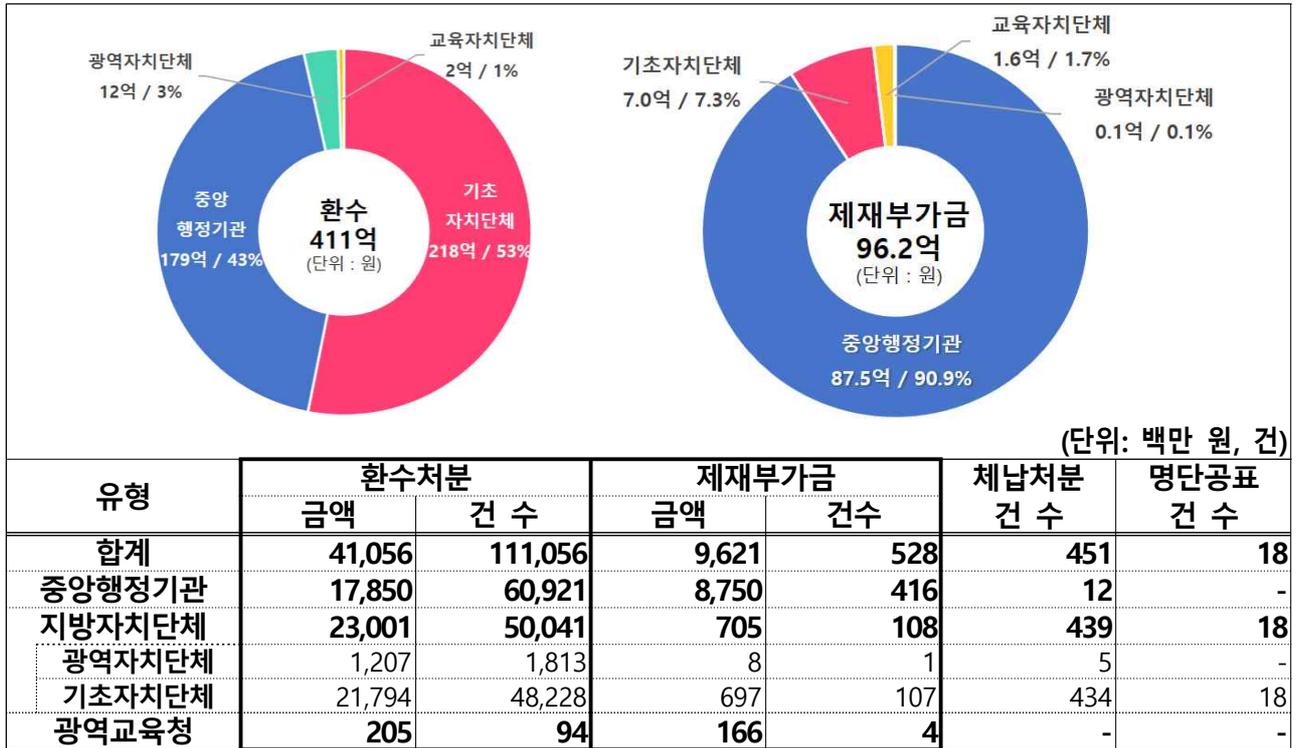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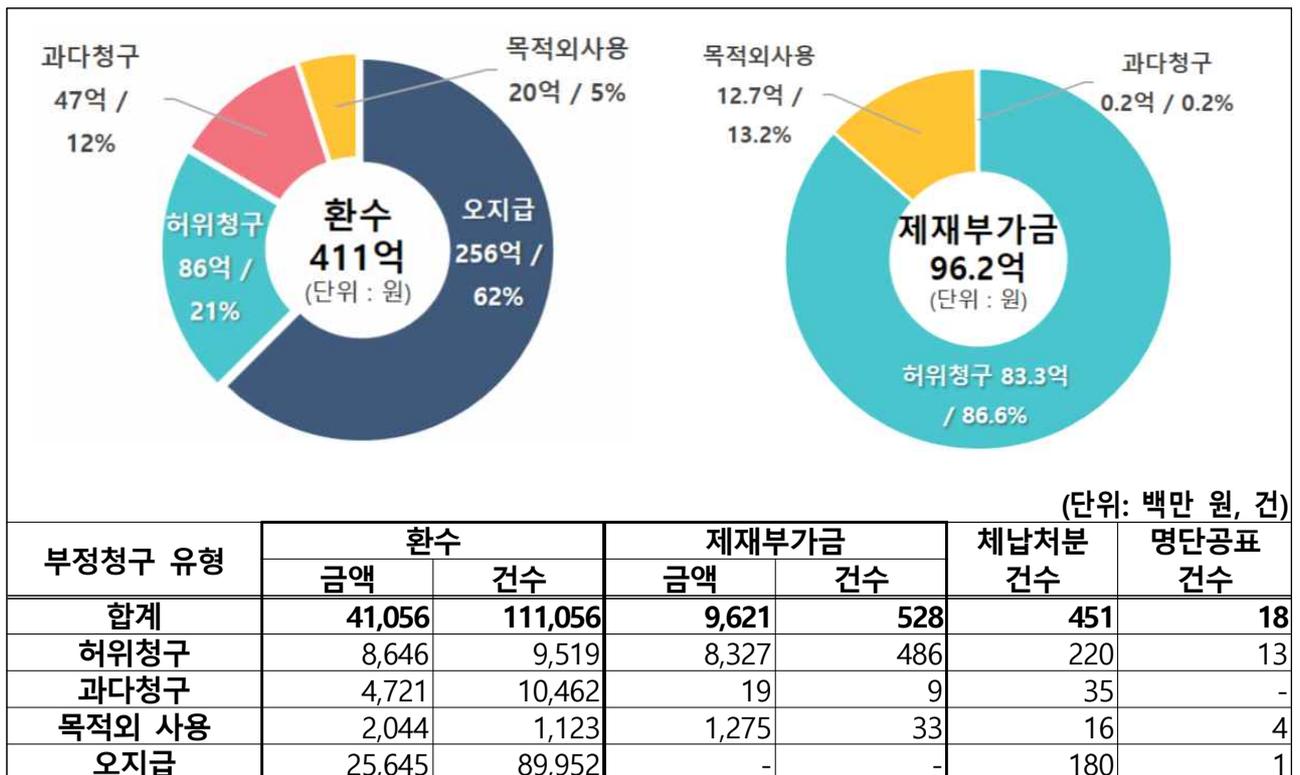
# 붙임1

## 기관별 · 유형별 · 분야별 환수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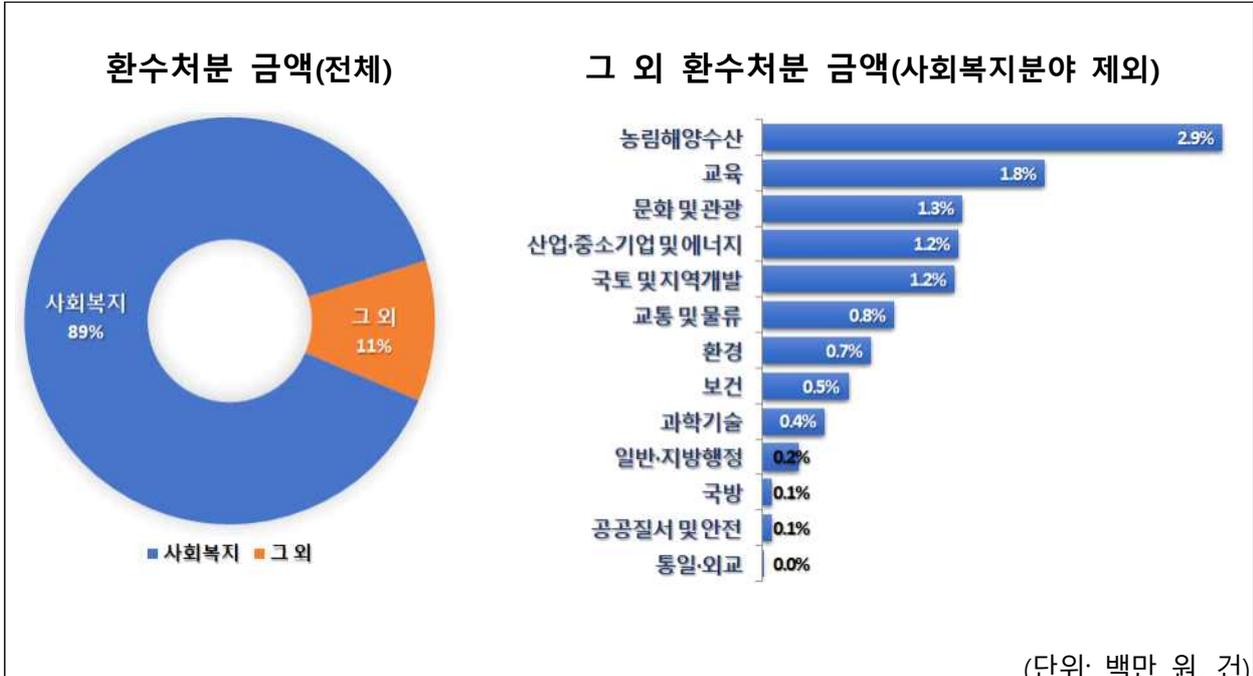
[그림 1] 2022년 상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그림 2] 2022년 상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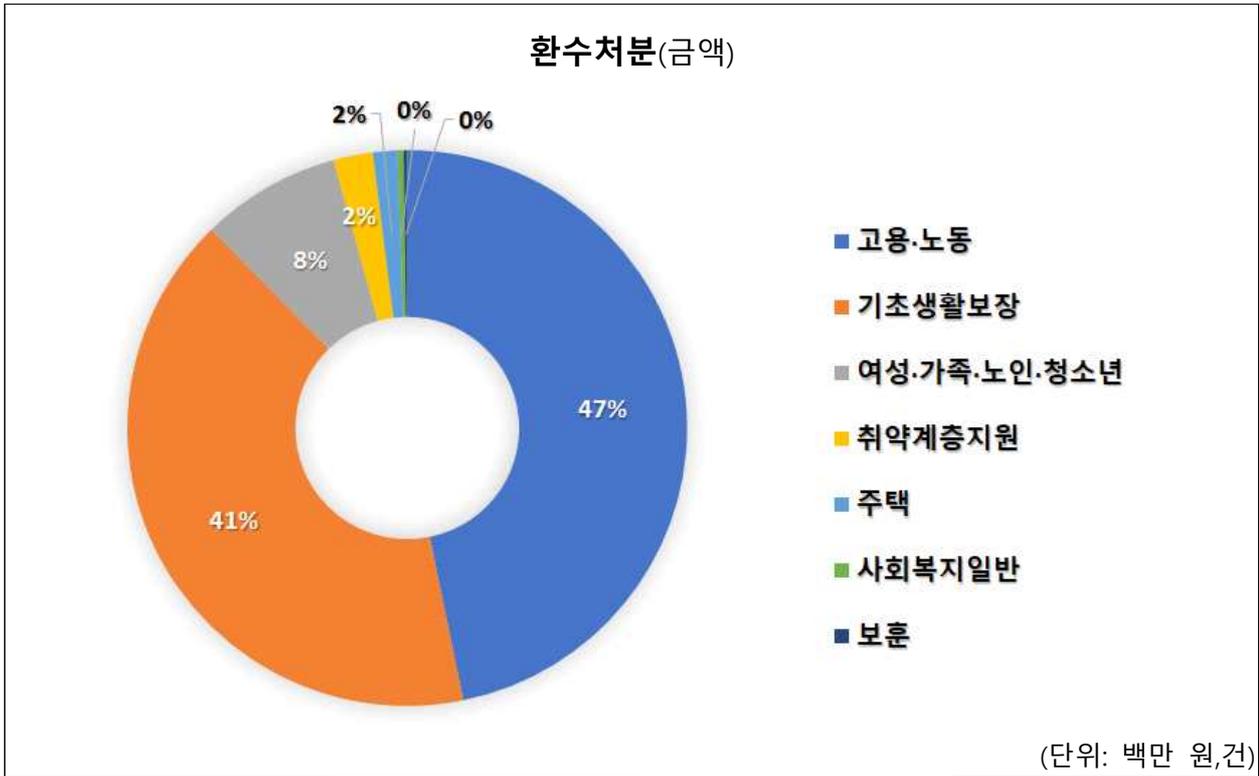
[그림 3] 2022년 상반기 분야별 환수 등 처분현황



(단위: 백만 원, 건)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b>합계</b>	<b>41,056</b>	<b>111,056</b>	<b>9,621</b>	<b>528</b>	<b>451</b>	<b>18</b>
사회복지	36,471	102,860	8,123	432	395	12
농림해양수산	1,189	2,317	399	77	34	4
교육	730	443	172	6	-	-
문화 및 관광	517	95	95	2	6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8	58	613	4	2	1
국토 및 지역개발	498	1,412	-	-	5	-
교통 및 물류	341	914	8	3	9	-
환경	279	157	-	-	-	-
보건	222	2,552	37	2	-	-
과학기술	160	1	160	1	-	-
일반·지방행정	93	175	14	1	-	1
국방	24	28	-	-	-	-
공공질서 및 안전	24	43	-	-	-	-
통일·외교	0	1	-	-	-	-
통신	-	-	-	-	-	-
기타	-	-	-	-	-	-

[그림 4] 2022년 상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36,470	102,860	8,123	432	395	12
<b>고용·노동</b>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17,066	60,530	7,912	406	19	1
<b>기초생활보장</b>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4,901	30,443	-	-	351	-
<b>여성·가족·노인·청소년</b>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2,954	6,842	66	16	23	11
<b>취약계층지원</b>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831	2,040	145	10	2	-
<b>주택</b>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512	2,404	-	-	-	-
<b>사회복지일반</b>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133	316	-	-	-	-
<b>보훈</b>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73	285	-	-	-	-
<b>공적연금</b>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	-	-	-	-	-

**붙임2**

**기관유형별 환수실적 최상위 기관의 세부사업별 현황**

[표 1]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고용노동부	합계	16,812,680	60,454	7,842,641	401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1,850,437	40,179	19,643	7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83,241	47	4,381,553	6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49,683	66	1,473,643	5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746,987	1,257	77,230	9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21,995	18,308	-	-
	고용창출장려금 등 19개 사업	1,960,337	597	1,890,572	173
	그 외 105개 사업	-	-	-	-

[표 2]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특별 자치도	합계	536,360	897	0	0
	생계급여	234,178	366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1,130	6	-	-
	주거급여	75,488	354	-	-
	기초연금	33,160	15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550	54	-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8개 사업	29,854	102	-	-
	그 외 1876개 사업	-	-	-	-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부사업 구성 등이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함

[표 3]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경기도 성남시	합계	628,955	1,037	24,496	0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일반)	376,742	479	-	-
	주거급여지원	147,161	431	-	-
	마을버스운영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사업	27,408	3	-	-
	기초연금	20,838	39	-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경상사업보조)	16,330	1	24,496	1
	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 등 25개 사업	40,476	84	-	-
	그 외 1,049개 사업	-	-	-	-

[표 4] (교육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합계	109,282	32	0	0
	학교시설환경개선 (○○초특별교실등환경개선)	100,000	1	-	-
	사립유치원지원(교직수당)	7,115	8	-	-
	누리과정지원 (사립유치원유아학비)	1,058	10	-	-
	기타교육비지원	368	1	-	-
	누리과정지원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비)	296	8	-	-
	누리과정지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231	2	-	-
	사립유치원지원(담임수당)	214	2	-	-
	그 외 2,797개 사업	-	-	-	-

**붙임3****부정수급 주요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li> <li>·(고용안정장려금) 참여자의 출·퇴근기록 및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li> <li>·(고용창출장려금)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li> </ul>
농림해양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형 공익직불금)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li> <li>·(농업경영체 지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산성 비품을 구입</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학교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편취</li> <li>·(학교스포츠클럽지원) 방과 후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원금 허위 신청</li> <li>·(두뇌한국21 R&amp;D) 연구담당자가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li> </ul>
문화 및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산업 활성화) 과제수행 불이행, 보조금 정산 미이행 등 법령위반</li> <li>·(영화제작지원)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li> </ul>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성 비품 구입</li> <li>·(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amp;D)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li> </ul>
국토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지원) 주택신축 포기로 인한 보조금 환수</li> <li>·(도시재생활성화)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li> </ul>